

정유4사, 정부 압박에 “뒤통수...”

정면대응 피해 우회비판 나서 ... 원가공개 앞서 품질문제부터 제기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을 낮추기 위해 관련법령 개정을 밀어붙이자 정유4사가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는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 안정에 가장 효과적인 세금 인하는 외면한 채 실효성이 크지 않은 과시형 정책만 내세우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특정 정유기업 간판을 단 주유소가 다른 회사의 석유제품을 혼합해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4월 정부가 발표한 <석유시장 투명성 제고 및 경쟁 촉진방안>에 담긴 내용으로, 정유기업 폴 주유소가 자가 폴(특정 정유기업 간판을 내걸지 않은 독립 폴) 주유소처럼 모든 석유제품을 구분 없이 취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유기업-주유소 수직 유통구조를 깬으로써 주유소가 폴에 상관없이 저가에 공급하는 석유제품을 판매하도록 해 가격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석유 수입업자의 비축의무를 폐지하고 정유기업의 가격공개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환경부는 일본에서 휘발유 등 석유제품을 수입해 판매하기 위해 환경기준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경부는 조만간 정유기업과 주유소 중 어느 쪽에서 폭리를 취하고 있는지 회계장부를 분석한 결과도 공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정유4사는 직접적으로 반발하기 보다는 정부가 내놓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일본 석유제품 수입을 위해 환경기준을 변경하는 것과 관련해 “일본의 석유제품 가격이 우리나라보다 비싼데 무슨 수로 일본산을 수입해 싼 가격에 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세계 최고수준으로 품질기준을 높여 놓았는데 일본산 석유제품을 수입한다는 명목으로 기준을 완화해 줄 수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석유제품 혼합판매에 대해서도 석유제품 품질 관리가 엉망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다른 관계자는 “주유소를 여러 곳 운영하는 업주들은 가격이 낮은 정유기업이 공급하는 석유제품을 다른 폴 주유소 탱크에 채워놓고 판매하는 등 이미 혼유를 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며 “그러나 혼유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면 유사휘발유 등 혼유 판매로 발생하는 품질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가릴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9/06>